다산포럼

임성진

‘녹색 성장’을 하자는데

요즈음 녹색성장(Green Growth)이 뜨거운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녹색성장이란 개념이 이같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것이 기업 프랜들리를 내세우며 경제개발에 매진하던 정부가 내놓은 예상 밖의 슬로건이기 때문일 것이다. ‘성장에 덧칠한 녹색’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새로운 ‘경제기적을 가능하게 해줄 신성장동력’이라는 찬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평가가 연일 나오고 있다. 이러다보니 도대체 녹색성장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개도국의 성장 욕구 충족

녹색성장은 개발을 지속하면서도 생태적 수용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개발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내용상 녹색성장은 작게는 오염통제를 위한 환경관리에서부터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생태적 효율화와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생산단계, 그리고 크게는 지속가능한 경제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 범위가 넓다. 즉 환경문제 해결의 사후처리적 단계부터 생태적 현대화에 이르는 모든 발전단계가 녹색성장의 대상이다.

한편 UN에서는 녹색성장이 빈곤 탈출에 필요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생태효율성을 제고하여 환경에 주는 부담은 최소화하는 경제성장 방식으로 통한다. 그래서 이 개념은 주로 저개발 또는 개발도상국가의 무분별한 개발편향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UNESCAP(유엔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선진국과 달리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정책이 절실한데, 녹색성장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더없이 좋은 개념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여러 목표 중에서도 성장을 강조해 이들 국가의 현실적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들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환경파괴의 폭과 속도가 매우 크고 빠르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할수록 환경개선의 사회적 요구도 함께 증가하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이들 국가는 대개 환경시설과 기술수준이 낮아 사후처리적인 조처만으로도 큰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환경투자가 가져오는 성장효과가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개도국 중 특히 아시아지역은 경제성장이 매우 빠르다. 그러나 기초적인 환경인프라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은 환경의 수용능력을 급격히 떨어뜨려 오염을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게다가 급변하는 국제환경규제로 인해 ‘선 성장, 후 환경처리’라는 전통적인 접근방식을 통해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UN은 아태지역을 녹색성장의 개념을 적용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으로 보고, UN-ESCAP의 주도하에 정책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지난 2005년 한국정부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Ministerial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유치하고, 녹색성장을 주제로 서울이니셔티브 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여기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환경성과 증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환경역할 강화’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 하에 총 24개의 정책분야가 논의되고 아태지역발전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었다. 이번 8·15경축사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녹색성장의 핵심 내용은 이 회의의 세 번째 목표인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의 환경에서 주로 따온 것으로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민이 대통령 설득할 차례

녹색성장을 발표한지 한 달도 채 안된 지난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그린벨트까지도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연일 개발패러다임을 부채질하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이야기하는 녹색성장은 90년대부터 생태친화적인 녹색체제로의 전환을 활발하게 논의했던 서구 선진국에서의 생태적 근대화나 녹색혁신과는 거리가 먼 개념임이 자명해졌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선택이다. 이젠 역으로 국민이 직접 성장신화로의 녹색성장을 제시한 대통령에게 그 개념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주대 사회과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먹구름’ 광주·전남경제 앞날이 걱정이다

광주·전남 지역경제의 앞날이 암울하다. 본사가 추석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CEO, 경제단체장, 경제학자 등 지역경제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지역경제 진단과 회생방안’을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난 지역경제의 현주소다.

지역경제의 실상은 심각하다. 30명 중 22명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최악’ 또는 ‘우려할만한 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희망적’이라는 응답은 7명에 불과했다. 지역경제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거나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전문가들이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경제난의 배경에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의 요인이 있다. 광주·전남에 국한된 현상도 아니다. 지방의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의 정책이 가장 큰 문제다.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SOC 등 허약한 경제기반과 수도권·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지목했다.

지역경제 침체를 초래한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가 1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지방자치단체(10명)와 지역 정치권 (4명), 지역주민 (2명) 등도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70% 이상이 ‘보통’이거나 ‘미흡하다’고 낮게 평가했다.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미분양주택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고사 위기에 몰린 건설경기부터 살리지 않으면 지역경제는 활성화될 수 없다. 수도권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미분양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지역사회도 반성해야 한다. 광주·전남 기업체의 99%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기도 나아질 수 있다. 지자체는 기업 및 투자 유치에 나서고 지역주민들은 내고장 제품 사주기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여수엑스포 ‘성공’ 위해 준비 본격화하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준비가 공식화됐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장승우 위원장과 오현섭 여수시장은 지난 14일 스페인 사라고사박람회 폐막행사에서 빈센테 곤살레스 로세르탈레스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으로부터 BIE기(旗)를 넘겨받았다. BIE가 공인한 인정박람회 차기 개최도시의 지위를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남은 것은 철저한 준비다. 여수엑스포는 지난 1993년 대전엑스포에 이어 한국에서 두번째 열리는 인정박람회다. 2012년 5월12일 개막되는 만큼 4년도 채 남지 않았다.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성공을 기약하기 어렵다.

우선 마스터 플랜부터 마련해야 한다. 여수엑스포는 민자 4천700억원을 포함, 1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조직위원회는 연말까지 박람회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차질을 빚어선 전체 밑그림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여수엑스포의 주제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다. 인류의 현안인 환경과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해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수 프로젝트’와 해양 및 연안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구하는 ‘여수선언’은 관심의 대상이다.

철도와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확충도 시급하다. SOC는 박람회 성공 개최의 핵심이다. 국제사회에 인지도가 낮은 여수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여수엑스포는 자칫 ‘안방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차별화 전략이다. 사라고사엑스포와 2010년 상하이엑스포를 벤치마킹하되 여수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지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여수엑스포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NGO 칼럼

김경일

오체투지, 서울로 가는 길

불덩이처럼 달구어진 자갈밭 위에 온몸을 던져 서울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벌레를 닮은 몸짓으로 불덩이같은 자갈밭, 먼지 나고 비에 젖어 질컥거리는 흙길, 기름 냄새 절은 아스팔트를 마다 않는 오체투지의 눈물길.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내던져버리는 천리길 강행군입니다.

바보 천치, 고집쟁이들입니다. 첫 출발지였던 지리산 노고단에서 두 분을 뵙고 와서 몇 날 며칠 불면의 나날입니다.

누구 말마따나 이제는 손자들 재롱이나 보실 연배의 흰머리 희끗한 두 분 성직자. 일찍이 새만금 물막이로 죽어갈 뭇 생명 살리겠다고 삼보일배 천리 길, 아니 그 이전 수몰될 위기에 처한 지리산 자락 살리겠다고 낙동강 순례, 다시 마치 실험용 쥐같이 내장 수술당할 처지에 놓인 이 땅 둘러보고자 강추위 아랑곳하지 않으시다가 두 무릎 뼈 먼저 절단 난 스님과 그 길 함께 길동무하시던 신부님.

이 길 위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두 분이 쓰러져 그대로 죽더라도 기어이 가시고야 말겠노라는 그 하염없고 무정한 길을 생각하면 마음이 저려 아무 것도 손에 안 잡혀 허성거립니다. 거꾸로 물구나무 서 듯 산을 기어 내려오시는 두 분 뒤를 따라가며 많이들 꺼이꺼이 속울음 울던 이들이 뿔뿔이 제 사는 곳으로 흩어져 돌아간 이 나라는 참으로 조용합니다.

이 나라의 구성원들은 기껏 신부놈과 중놈 둘이, 엎어져서 오든 꼬꾸라지며 기어오든 무슨 일이냐며 제 할 일 바쁜체 하는 것인지요. 아니 이 나라의 모든 도시는, 깊은 사랑과 자비의 성찰을 구하며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울려나와 터져 번지는 ‘말없음의 말’을 듣고 보지 못하는 것인지요.

요즈음 우리는 잘사는 것에 목매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남보다 더 쌓아놓고 떵떵거리며 목숨 부지하고 사는 것만이 참 행복일까요. 남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는 것만이 행복일까요. 저는 참으로 행복하기 위해 시민운동을 택하고 이제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미래에 이 땅에 오실 이들이 두루 행복한 세상을 이뤄 보고자 많이 억지도 부려보고, 없는 힘도 내어보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우리 사회의 돈만 벌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허상을 좇는 현실이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정상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참으로 허망하고 허망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개발 위주의 삶의 방식에 경종을 울리는 두 분의 천리 길 강행군이 그래서 더욱 귀합니다.

과연 우리가 수많은 생명을 해치며 강과 산을 허물어야 할 만큼 가난한지, 오늘도 로드킬 피 냄새 위에 이마를 대고 두 무릎과 두 팔꿈치 그 위에 올려놓고 쓰다듬으며 헤엄쳐 서울로 가시는 두 분의 오체투지 천리 길 마음으로 울며 좇으며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봅니다.

〈광주 생명의 숲 사무국장·시인〉

찰칵! 동물세상

코끼리 조련사

스리랑카, 라오스,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오랜 내전과 전쟁으로 인해 무척 어렵게 살고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처럼 아예 시스템화된 도시 국가라면 모르지만 그들의 자연은 너무 더워서, 자연히 사람이나 동물이나 게을러지게 마련이다. 만일 그들이 우리처럼 역동적인 삶을 살았다면 아마 ‘뇌일혈’ 같은 증세로 쓰러지는 이들이 속출했을 것이다.

태국에 다녀온 후에 온대 국가 사람들이 활동적이고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기후 탓이란 걸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한낮에 길거리에 잠깐 서 있었더니 머리가 핑 돌아 시원한 그늘을 찾는 것 이외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으니까.

코끼리가 많아도 그들은 수출을 하지 않는다. 코끼리 보호 측면도 있지만, 사실 국민들의 취업을 도우려는 정책상의 의도가 깔려있다. 대신 코끼리를 임대로 빌려준다. 임대기간은 무려 20년, 가격은 파는 가격과 거의 똑같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붙는다. 자기 나라 조련사를 코끼리 한 마리에 한 사람씩 붙여서 데려가라는 것이다.

우리 동물원에도 조련사들이 코끼리와 함께 왔다. 사진에 보는 이는 이름은 ‘캄텐’이고 23살 총각이다. 고등학생처럼 애띠게 생겼고 우리말도 잘한다. 그래서 대화하기가 편하다. 자기 집에 코끼리를 두 마리 키우는데, 한 마리는 자기가 데려왔고 또 한 마리는 집에서 기른단다. 라오스에선 코끼리가 일반 집 한 채 가격이고 재산목록 1호라고 한다. 가난해도 거대한 코끼리를 소처럼 기르는 나라가 세상에 있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無等鼓

비엔날레와 경제

광주에선 지금 미술의 향연이 한창 펼쳐지고 있다. 이제는 세계적인 미술 이벤트로 평가받고 있는 광주비엔날레가 지난 5일 개막돼 전국은 물론 외국에서도 관람객들이 몰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가 36개국 127명, 전시작품 수만도 무려 1천400개에 이르는 대형 잔치다. 평소에 지방이나 한국에서 접할 수 없는 세계적 수준의 작품을 만나는 것 자체가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슴 두근거리는 설렘, 혹은 즐거움 이상의 쾌락을 맛보게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문외한들에겐 7회째에 접어든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느낌은 늘 난해하다는 것이다. 느낌 그대로 감상하라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워 작품설명 읽기나 듣기에 급급했고 뻐근한 다리 이끌고 한바퀴 돌아 나오면 그만이었던 기억이 전부다.

그렇다면, 정말로 미술을 모르는 무지한 관람객들이 비엔날레를 즐길 방법은 없는가. 이에 대한 해법을 엉뚱하게도 경제학자가 제시하고 있다. 미국 조지메이슨대 경제학 교수인 타일러 코웬은 작품을 감상할 때 ‘각각의 전시실에서 딱 한 점씩의 그림을 집에 가져가게 한다면 어떤 그림을 가져가고 싶은지와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 보라’고 권하고 있다.

이렇게 제안하는 논리적 배경이 거창하지만, 결론적으론 투자(입장료)를 했으면 본전은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와 관련해 투입한 비용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태도, 주의를 쏟아 몰입하는 성과를 얻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적 자세라는 의미로 정리된다.

이제 그럴듯한 감상법을 마련한 만큼, 틈을 내 비엔날레 전시장을 찾아 볼 일이다. 단순한 자기만족을 넘어 다양한 작품을 통해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작품속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할 창조적 대안을 구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불황의 시름을 털어낼, 미처 생각지 못한 묘안의 단초라도 얻어 낼지 누가 알겠는가.

/기현호 경제부장 kihh@kwangju.co.kr

車사고 입원율 일본의 8배… ‘나이롱 환자’ 대책 세워야

소위 나이롱 환자들이 있다.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꾀병 환자를 일컫는다. 그런데 얼마전 보도를 보니 앞으로는 정부가 이런 나이롱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킬수 있도록 법을 고친다고 한다.

자동차 사고는 부상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 가벼운 경상을 8급 정도로 보는데 우리나라 자동차사고에서 8급 이하 경상자는 전체 부상자의 95%이지만 환자의 입원율은 무려 72%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일본의 자동차보험 입원율인 9%에 비하면 자그만치 8배나 높은 수치다.

이들은 대부분 일명 ‘나이롱 환자’다. 이들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은 누가 대는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서 빠져나간다. 거기다가 이들이 입원실을 차지하다 보니 정작 입원해야 하는 환자들은 입원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다. 수익을 위해 이런 환자를 붙들고 있는 병원들의 관행도 고쳐져야 한다.

국민과 정부의 노력으로 나일론 환자를 근절해 보자.

▲심희수·광주시 북구 대촌동

기능경기대회 농기계수리 분야 폐지 안된다

농촌에는 농기계 수리점도 부족하고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농번기때 농기계가 고장나면 수리까지 몇 일씩 기다려야 한다. 부품이 없을 때면 1~2주일도 더 걸린다. 이 때문에 농민들의 손실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수리 전문인력들의 동기부여가 되어온 국내 기능경기대회에서 농기계수리 분야를 폐지한다니 농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농기계 분야는 농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간산업이다. 그래서 전국의 농업고에는 농기계과가 있고 그곳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하지만 기능경기대회에서 농기계 분야가 폐지되면 농업고에서도 농기계과가 점차 사라질 것이다.

결국 이는 영농 차질로 돌아오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농민들 몫일텐데 이를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하다.

▲김성준·광주시 서구 화정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